
ESG Insight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시대, 기업의 공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July 2026

삼성KPMG ESG 비즈니스그룹

—
home.kpmg/kr

Contents

	Page
Infographic Summary	2
I. 들어가며: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4
II. 국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도입 현황	6
(1)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 요약	6
(2)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 기준 주요 내용과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간 차이	7
III.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방향	11
(1) 공시 프로세스 설계: 재무제표 공시 프로세스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	11
(2) 거버넌스 정립: 지속가능성 경영의 책임 체계 강화	14
(3) 보고기업 및 공시범위 설정: 보고단위의 정합성 확보와 중요성 중심 접근	18
(4) 인증 대응 준비: 제3자 인증을 고려한 공시 체계 구축	21
IV. 나오며: 지속가능성 공시, 이제는 실행체계 구축의 시점	24

Infographic Summary 1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요약('26.07.08 최종안)

주요 변화 Summary

- ☑ 최초 공시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이후 단계적 로드맵 제시)
-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즉시 시행
- ☑ 공시 개시 ('28년) 2년 후 제3자 인증 의무화 (FY29 공시정보에 대해 '30년부터 의무화)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과 초안 비교내용 상세]

	최종안 ('26.07.08)	초안 ('26.02.25)
변경 공시대상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107개사 ✓ 29년 (FY28)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157개사 ✓ [잠정] 30년 (FY29)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259개사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58개사 ✓ [예시] 29년 (FY28)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107개사 ✓ 추후 국제동향에 맞춰 추가 확대 논의
변경 첫해 유예기준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의 국내외 종속기업 공시 면제 (and 조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 또는 매출이 연결기준 10% 미만의 국내외 종속기업 공시 면제 (or 조건)
변경 공시채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내 공시 (법정공시 바로 적용)	거래소 공시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 공시 전환)
변경 공시시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과 동일한 3월말 공시 (배출량 정보도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 수치를 3월말 동일하게 공시)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과 동일한 3월말 공시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 8월 중순 공시 허용)
변경 면책 적용	도입 초기 3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 제재, 형사처벌 면제 *단, 고의성에 따라 손해배상·행정책임 적용	도입 초기 첫해, Safe harbor 적용 및 제재조치 유예
변경 제3자 인증	공시개시 후 2년 간 유예 (최초 공시기업의 경우, FY2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30) 공시부터 인증 의무화)	도입 초기 자율적 인증 (추후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 검토)
Scope 3 유예	3년 유예 (최초 공시기업의 경우, 31년 (FY30) 부터 공시 시작)	3년 유예 (최초 공시기업의 경우, 31년 (FY30) 부터 공시 시작)

대응방향

아래 사항에 기반한 종합적인 KSSB 대응 로드맵 수립 필요

01 종속기업 별 기후 공시정보 관리현황에 대한 신속한 진단



연결기준 종속기업 데이터 관리 방안 수립

02 사업보고서 공시부서, 지속가능성 부서, 재무부서 간 협업방안 논의



기후 관련 현재 및 예상 재무영향 산정과 지속가능정보-재무제표간 상호 연계 방안 수립

03 기존 공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일관성 점검



연결기준 기후 공시 정책 및 내부통제 수립

Infographic Summary 2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ESG 환경 변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

공시 체계

공시 의무화
대응 기반 구축

공시 절차

공시 프로세스
수립

기후 전략

기후 전략
체계 정비

재무영향

재무영향 분석
고도화

공시 체계 구축

KSSB 기준에 따라 공시범위·R&P를 재정립하고,
공시정보 작성·검증 프로세스 구축

기후 공시 고도화

별도 보고서 발간 예정

연결 기준 온실가스 산정체계와 기후 전략 이행체계를 정비하고,
기후 위험·기회의 재무영향 분석 고도화 필요

데이터, 조직, 프로세스, 내부통제 포함한 전사적 공시 체계 구축 필요

공시 프로세스 설계

표준화·내부통제·시스템 기반으로 전환

- 공시 지표 정의 및 종속회사 데이터 수집체계 마련
- 데이터 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 수립
- 조직 및 거버넌스 정비,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 고도화

거버넌스 정립

ESG 공시를 재무공시 수준의 경영 책임으로 전환

- 공시 책임자는 CFO로 전환 가속화
- ESG 전담조직과 재무·회계와 연계 강화
- ESG 공시 전담 인력 확대

보고기업 및 공시범위 설정

연결기준+ 중요성 기반 우선순위 설정이 핵심

-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단위
-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사업장
- 위험 노출이 큰 사업장
- 투자자 관심이 높은 영역

인증 대응 준비

'검증 가능한 회계정보 수준'으로 관리

- 데이터 산출 기준 명확화
- 작성 프로세스 문서화 및 검증가능한 증빙 확보
-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재무제표 수준의 관리체계 정비

전사적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과제

01

재무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시 대응조직과 재무부서 간 협업 강화

02

권역·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공시 프로세스 구축

03

주요 계열사 선제 구축 후 하위 계열사로 공시 체계 점진 확대

Source: 삼정KPMG

I. 들어가며: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은
보고기업의 재정적,
공시 프로세스 정비, 기후
전략 고도화,
재무영향 분석 체계 구축을
포함한 전사적 공시 체계
재편 요구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공시 체계의 재편

2026년 7월 8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시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스코프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대상 기업별로 3년간 유예된다.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최종안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관리와 공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KSSB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공시 의무화 대응 기반 구축이다. 기업은 KSSB 기준에 따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기업을 설정하고, 중요성 판단에 근거하여 정보별 공시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설정된 보고기업과 공시범위를 반영하여 공시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역할과 책임(R&R)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시 프로세스의 수립이다.** 보고기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시 대응을 위해 공시정보 작성 체크리스트 등 체계적인 정보 작성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공시정보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반의 자체 검증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 전략 체계의 정비다.** 재정의된 보고기업을 반영하여 연결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기존에 수립한 탄소중립 목표와 감축수단을 재점검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성 요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고도화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재무영향이 발생하는 경로를 구체화함으로써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시나리오 분석 및 회복 탄력성 평가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시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성 공시 담당부서를 포함한 기업 전반의 역할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데이터 관리 범위의 확대와 공시정보의 정합성 및 신뢰성 제고, 거버넌스·위험관리·전략·목표 및 지표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적·프로세스적 해법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핵심 과제 중, ‘공시 의무화 대응 기반 구축’과 ‘공시 프로세스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체계 구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기후 전략 체계 정비’와 ‘지속가능성 요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고도화’는 기업의 전략 수립과 재무적 영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주제로서, 향후 별도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공시 의무화 대응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담당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보고범위와 중요성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내외 선진기업의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공시 프로세스 수립’에 대해서는 공시 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기준 관련 동향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공시 의무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KSSB 도입에 따른 공시 패러다임 전환]



Source: 삼정KPMG

II. 국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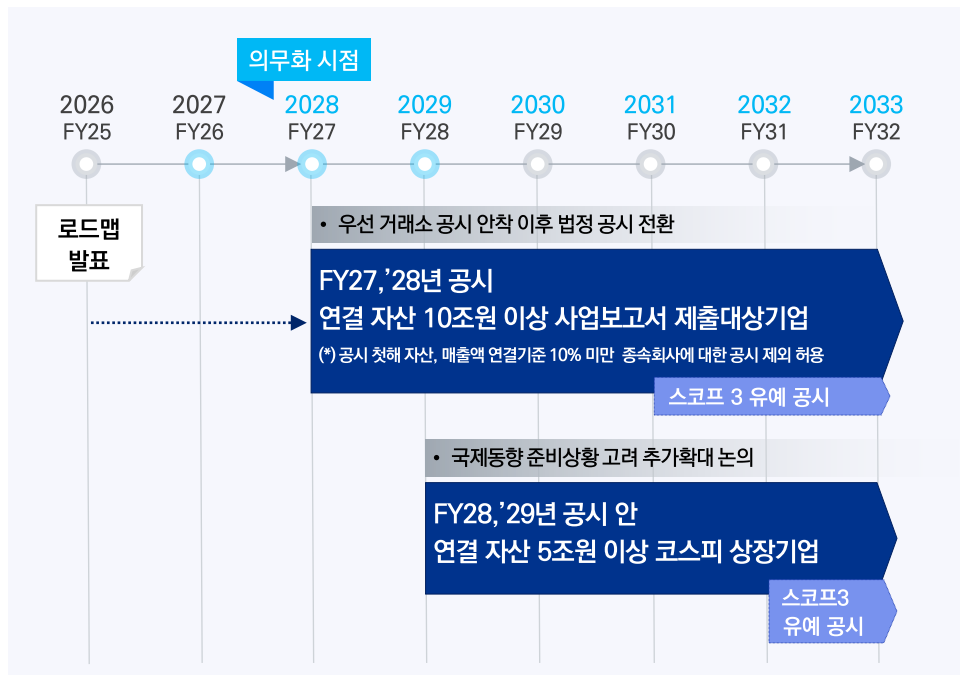
(1)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 요약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에 따르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7년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우선 2028년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공시 이행 현황과 시장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2028년부터 즉시 시행되며, 3월말 사업보고서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보고채널·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보고의 적시성 및 공시정보의 유용성 제고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도 배출권 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3월말에 동일하게 공시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고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스코프3 배출량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으로 구체화 되었다.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27년
사업연도('28년 공시)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 적용

[KSSB 공시 의무화 적용 시기 및 대상]



Source: 삼정KPMG

이번 최종안은 초안과 비교해 공시 대상, 공시 채널, 인증 제도 등 세 가지 핵심 축에서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공시 대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시 채널 또한 거래소 공시에서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제 3자 인증은 기존의 자율 인증 후 단계적 검토 방침에서 나아가 의무화 시점을 규정하는 것으로 요구 수준이 강화되었다.

이는 국제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도입 의지를 명확히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핵심 경영 공시 체계의 일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이번 최종안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2)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 기준 주요 내용과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간 차이

유용성·정합성·수용가능성을 고려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주요 내용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마련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게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제 공시 기준과의 상호운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해외 활동과 해외 자금 조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 공시 부담 최소화 필요성, 그리고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완화 방안을 반영해 설계되었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는 제1호와 제2호의 2개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 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을 다루며, 기업이 공시해야 할 핵심요소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제시한다. 제 2호는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전환 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한다. KSSB는 제1호의 공통 공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별 상세 기준이 연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SSB는 ISSB 기반의 국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특성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개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 모두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영역에 걸쳐
TCFD*를 포함하는 핵심
요소와 일치하는 구조

	KSSB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	KSSB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공시정보 4대 핵심요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산업별 공시사항(선택/참고) 등 추가적인 세부정보 요구 								
경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비교정보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최초 적용 기업은 당해 기간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허용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외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노출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및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 								
구조	<p style="text-align: center;">목적 및 적용 범위, 일반사항, 실무적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핵심 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지배구조</td> <td>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전략</td> <td>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기후 위험,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위험관리</td> <td>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식</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지표 및 목표</td> <td>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목표 및 성과 + 기후 관련 산업 공통 및 특화 지표(선택)</td> </tr> </table>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등	전략	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기후 위험,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식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목표 및 성과 + 기후 관련 산업 공통 및 특화 지표(선택)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등									
전략	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기후 위험,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식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목표 및 성과 + 기후 관련 산업 공통 및 특화 지표(선택)									

Source: 삼정KPMG

Note: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의미함

KSSB는 국내 제도 환경과 기업의 공시 현실을 반영해 설계, ISSB는 모든 지속가능성 이슈 포괄하는 반면, KSSB는 기후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외 이슈는 선택 공시로 운영

KSSB와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의 주요 차이점

KSSB는 기본적으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제도 환경과 기업의 공시 현실을 반영해 일부 항목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공시 주제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있다. ISSB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적용 초기에는 기후 공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KSSB는 기후를 우선적인 의무 공시 주제로 설정하고, 그 외 지속가능성 이슈는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기후 이슈가 재무적 영향의 정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KSSB는 기업의 초기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적용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ISSB가 위험·기회 식별 시 산업기반 공시기준의 고려를 사실상 요구하는 데 비해, KSSB는 이를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산업기반 지표 역시 ISSB는 공시를 요구하는 반면, KSSB는 선택 공시 항목으로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KSSB는 ISSB 기준과의 큰 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과 준비 수준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한 국내 적용을 위한 조정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KSSB와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의 주요 차이 비교]

항목	ISSB	KSSB	배경
공시 주제 - 기후 우선 공시 (제1호 문단 5.1 ~ 5.3)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시(적용 첫해에는 기후만 공시 허용)	기후는 의무 공시.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공시는 주제별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보고 직접적 영향(정량화 용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요하게 고려
지침의 원천: SASB*기준의 활용 (제1호 문단 26 ~ 31)	위험 및 기회와 공시 요구사항 식별 시, SASB 기준 적용가능성 반드시 고려	SASB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적용에 애로사항 有(국내 산업 특성에 부적합 경우 존재)
보고기업 (제1호 문단 20)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중속 기업 포함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 제한 시, 정보공시 회피 → 위상 문제 대두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 연결실체의 정보 요구
산업기반지표	산업별 특성 반영 지표 공시 요구	산업별 특성 반영 지표 공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업 준비상황·SASB 정합성고려 (수용가능성)
단기, 중기, 장기의 정의 (제1호 문단 E7~E7.2, 제2호 문단 10 ~ 10.2)	단기, 중기, 장기를 정의하지 않음	단기(1년), 중기(1~5년), 장기(5년 ~)를 정의. 단, 다른 정의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간 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미공시 사실 근거 기술	-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생략한 경우, 사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목적
내부 탄소 가격	내부 탄소 가격 적용 여부와 방법, 톤당 가격 공시	탄소 가격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방법 공시(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정보 공개 부담고려(수용가능성)

산업기반 공시 기준과
 산업기반지표 활용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 및
 구체화해 기업의 수용
 가능성과 초기 이행 부담 고려

Source: 삼정KPMG

Not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를 뜻함

III.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방향

본 장에서는 성공적인 KSSB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 공시 프로세스 설계, △ 거버넌스 정립, △ 보고기업 및 공시범위 설정, △ 인증 대응 준비를 제시하고, 각 영역별 주요 고려사항과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시 프로세스 설계: 재무제표 공시 프로세스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

KSSB 공시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프로세스 정립

재무보고 프로세스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프로세스 구축

KSSB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에서 재무제표 공시와 기후 관련 공시는 전략 수립부터 데이터 생성, 관리 및 집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외부 감사·인증, 공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공시 의무화의 도입으로 기존의 정성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정량 중심의 연결 공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추적 가능성 및 감사 대응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 정보 취합을 넘어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재무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 지표 정의의 표준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책임(R&R) 정립, 검증 절차의 문서화, 변경 이력 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가 연결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집계·관리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엑셀(Excel)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ESG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 공시는 과거 실적 중심으로 하는 재무제표 공시와 달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위험·기회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정보 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추정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높은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확한 데이터 공시와 함께 주요 가정과 산정 방법, 불확실성 범위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 공시는 연결 기준 내부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스코프3 배출량을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의 정보를 요구한다. 데이터 관리 범위 역시 사업장과 계열사를 넘어 공급업체,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협업 체계와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기업은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되, 미래지향적 정보, 추정 기반 데이터, 가치사슬 관점의 정보 관리 등 지속가능성 공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무정보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 공시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율적 보고를 넘어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과 통제가 요구되는 핵심 공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표준화, 내부통제, 검증 체계를 포함한 공시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아울러, 미래지향적 정보, 추정 기반 데이터, 가치사슬 확장 등 지속가능성 공시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체계 구축 필요

[재무제표 공시와 기후 공시 프로세스]



Source: 삼정KPMG

연결 기준 공시의 핵심은 그룹 전반에 걸쳐 공시 지표와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종속회사의 데이터 수집·검증·보고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체제 구축

연결 공시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KSSB는 보고기업을 재무제표의 보고기업 즉 연결실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어, 기업은 연결 기준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취합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시 지표 정의 및 산정 기준의 정립

동일한 지표라도 조직별로 상이하게 해석하거나 산정할 경우, 연결 기준 집계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표준화된 정의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종속회사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속회사 데이터 수집 체계 수립

각 종속회사의 데이터 관리 수준과 담당 인력의 이해도 차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표준화된 데이터 템플릿을 마련하고, 명확한 제출 기준과 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KSSB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 기준 데이터의 정확성과 내부통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필요

데이터 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 수립

외부 검증을 전제로 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입력, 검토, 승인으로 이어지는 검증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상 수치 및 성과 변동 분석을 위한 검토 로직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증빙 관리 및 보관 기준도 함께 수립하여 문서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직 및 거버넌스의 정립

다수의 조직이 관여하는 만큼, 명확한 역할과 책임(R&R) 정의가 필요하다. 기업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종속회사별 담당 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및 이슈 해결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

최근 많은 기업은 KSSB 공시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 ESG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수작업 중심 데이터 관리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데이터 입력, 검증, 집계 및 보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SG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시에는 회사의 연결 기반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실제 사용자의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데이터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회사의 니즈를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연결 공시 체계 구축의 필수 요소이지만, 실제 그룹 차원의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업은 단계적으로 공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결 공시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Source: 삼정KPMG

(2) 거버넌스 정립: 지속가능성 경영의 책임 체계 강화

글로벌 차원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장기 전략 수립과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한 전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룹 차원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는 지속가능성 조직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조직은 본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종속기업으로부터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하며, 기후변화, 인권, 공급망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공시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및 신뢰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보고 업무의 범위를 넘어 전사적 통합 관리 체계와 명확한 거버넌스의 책임과 역량을 요구하는 과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KPMG International의 2024년 해외 기업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ESG 거버넌스 설문조사와 KPMG Korea가 2026년 국내 대기업 30여 개사의 ESG 실무진 인터뷰를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단위 지속가능성 조직의 운영 방식, 조직 구조, 주요 성공 요인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다. 두 조사 수행 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유럽과 한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분석은 공시 의무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 및 거버넌스 운영 방향을 비교·검토하고, 해외와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대응 트렌드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미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두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와 운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회, 감사·감독기구, 경영진, 사업부로 이어지는 전사적 책임 체계 속에서 지속가능성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성공 요인으로 조직 간 유기적 연계 강화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성 조직과 재무부서, 구매·공급망 관리부서, 내부통제 관련 조직 간 협력이 원활할수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합보고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순한 보고 활동이 아닌 전사적 경영 체계의 일부로 내재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음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사회, 최고경영진, 지속가능성 공시 담당부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ESG 공시 대응력은
지속가능성 조직 단독의
역량이 아니라,
주요 조직과의 협업 구조를
포함한 거버넌스 수준에서
결정

이사회 차원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는 위원회 설치
여부보다 경영·위험 체계 내
내재화 수준에 의해 좌우

거버넌스 현황: 이사회

KPMG International과 KPMG Korea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 대상 기업의 약 50%는 이사회 차원의 지속가능성위원회 또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와 해외 기업 간에는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내 조사 대상 기업은 모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지속가능성' 또는 'ESG'라는 명칭 아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반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별도 위원회에 집중하기 보다, 경영, 혁신, 보상, 안전, 조직문화 등 기존 위원회 체계 내에서 각각 관련 사안을 분산하여 다루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이원화된 구조를 가진 기업이 단일 이사회 구조를 가진 기업보다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른 경영 아젠다와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의 약 20%의 기업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별도 위원회가 아닌 다른 주제와 함께 다루는 위원회, 즉 감사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배경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공시 요건'으로 인식되거나 투자자관계(IR) 관련 주제로 다루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 같은 구조가 최근 변화하고 있거나 향후 변화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예를 들어 기후변화 위험과 같은 주제는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되, 그 외 지속가능성 이슈는 별도의 전담 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진지속가능성
거버넌스, CFO 중심 공시
책임 강화와 전사 협의체
기반 의사결정 구조로
고도화 중

거버넌스 현황: 최고경영진

KPMG International과 KPMG Korea의 조사 결과, 국내외 조사 대상 기업의 약 47%는 최고경영자(CEO)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존에 CEO가 수행하던 최고 공시 책임자 역할이 최근 법정 공시화 흐름에 따라 CFO에게 이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향후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재무공시 체계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시 책임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고 공시 책임자의 지정과 별개로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운영 체계로는 '협의체'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협의체 기반의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의체에는 재무, 회계, 관리회계, 내부회계 등 재무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인사, 법무 등 주요 지원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투자자관계(IR), 영업, 전략 부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결정을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최고 책임자 지정 현황]



Source: KPMG International(2024), 'Anchoring ESG in governance' 및 삼정KPMG Analysis(2026)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체계는 전담 조직 구축을 넘어 재무 연계와 전문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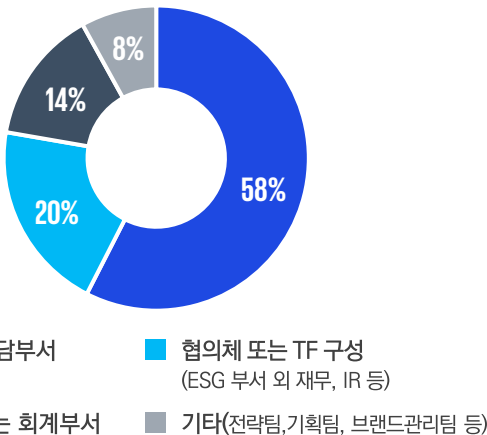
거버넌스 현황: 지속가능성 공시 담당부서

KPMG International과 KPMG Korea의 조사 결과, 국내외 조사 대상 기업의 90% 이상은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를 명칭으로 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의 기업은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여러 사업부와 기능 조직을 연계해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의 약 14%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능을 재무 또는 회계 부서에 배치해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ESG 공시가 재무 공시와의 함께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 또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형태로 제공되는 사례가 확대되면서, 재무 공시와의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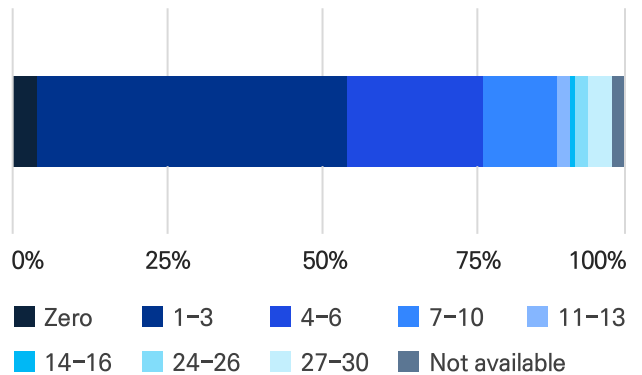
KPMG International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업 내 ESG 공시를 전담하는 인력 규모는 절반 이상이 3명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서, 약 2년 사이 관련 전담 인력 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전략 수립, 목표 설정, KPI 관리와 같은 내부 관리 영역과 인권,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공급망 관리 등 주제별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6~10명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역시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ESG가 단순한 공시 대응을 넘어 전사 운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의 구조적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담당부서 현황]



[해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전담 인력수 현황]



Source: KPMG International(2024), 'Anchoring ESG in governance' 및 삼정KPMG Analysis(2026)

Source: KPMG International(2024), 'Anchoring ESG in governance'
 Note: 비재무 보고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인력이 17~20명, 21~23명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KSSB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결실체를 보고범위로
하되, 실제 공시 내용과
수준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핵심

(3) 보고기업 및 공시범위 설정: 보고단위의 정합성 확보와 중요성 중심 접근

재무제표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한 연결실체 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 따르면, KSSB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에서 보고기업의 범위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역시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 정보를 동일한 보고단위에서 제공함으로써,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단순한 형식적 일치에 그치지 않고,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공시 간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에 해당한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별도의 범위나 기준에 따라 분리해 공시할 경우, 이용자는 재무 정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별도의 보고범위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일부 종속기업을 구조적으로 제외하는 접근은 기준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투자로 인식되지만 연결실체의 일부로 보지는 않으므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보고기업의 전망,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자체를 보고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위험·기회, 가치사슬상 노출, 사업모형을 통한 투자성과에 대한 영향 또는 재무적 효과는 공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종속기업을 보고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기업의 범위와 공시할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는 보고기업의 경계 자체는 연결실체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실제 공시 여부와 공시 수준은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종속기업을 보고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연결실체 전체를 전제로 관련 정보를 식별한 후 그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 하겠다.

결국 핵심은 ‘어떤 회사를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이처럼 보고범위는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일관되기 유지하되, 공시 여부와 수준은 중요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 적용의 출발점이다.

KSSB 실무 적용의 핵심은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정보를 식별하되,
공시 여부는 법인 단위가
아닌 정보 단위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

보고범위와 공시범위의 구분 및 정보 중심의 중요성 접근

지속가능성 공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중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제공됨으로써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중요성 판단은 개별 정보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법인이나 사업단위를 일률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판단 과정에서 사업모형, 가치사슬상 위치, 노출된 위험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나, 핵심은 '어떤 종속기업을 포함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조직 단위가 아니라 정보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성 판단은 개별 정보의 독립적인 판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정 정보가 단독으로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전체 공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개별 정보뿐 아니라 정보 간의 상호연결성과 집합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사업장의 위험은 각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일한 유형의 위험이 여러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연결실체 차원에서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보고기업의 범위와 실제 공시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보고기업의 범위는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유지되지만, 그 범위 내 모든 정보가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시 여부와 공시 수준은 정보별 중요성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점에서 공시범위는 정보 단위로 유연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부 종속기업을 사전에 제외하는 방식보다, 연결실체 전체를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식별한 후 각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공시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이 보다 적절하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위험이나 기회라 하더라도 모든 종속기업에서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정보는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연결실체 전체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개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성 판단은 단순한 정량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무적 영향의 규모뿐만 아니라 해당 위험 또는 기회의 성격, 산업과 사업 구조 특성, 관련 규제 환경, 그리고 다른 공시 항목과의 연계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제표상 중요성 개념과 유사한 기반을 가지면서도 지속가능성 정보가 지닌 미래지향성, 가치사슬 전반으로의 확장성, 비재무적 특성을 반영한 확장된 판단 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기보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량지표는 개별 법인 수준에서는 중요성이 낮더라도 연결실체 기준에서 집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물리적 위험, 전략, 대응활동과 같은 정보는 특정 자산, 지역,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유형별 접근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공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실무 적용: 단계적 접근과 운영상 유의사항

실제 공시 준비 과정에서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간과 비용, 데이터 가용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 수집과 검토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질적 기준을 활용해 사업 단위나 정보 유형을 우선순위별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단위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어디까지나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적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보고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특정 회사를 외부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논리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외부 공시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연결실체 전체가 보고기업이라는 점이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공시 내용과 수준만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내부 운영 방식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명 방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 단위에 대해서만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해당 사업 단위만이 공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전체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중요성 판단이 수행되었음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결국 KSSB 공시 대응의 핵심은 보고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실체를 전제로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그 중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 보고기업의 범위는 재무제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정되지만, 실제 공시 내용은 정보별 중요성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보고범위를 임의로 재설정하기보다 정보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시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시간, 비용, 데이터 가용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외부 공시에서 연결실체 전체를 전제로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공시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함

공극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보고범위를 축소하거나 단순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결실체 전반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일관된 체계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기업 및 공시정보 범위 요약]

보고기업 범위	공시정보 범위
<p>① 재무제표와 동일한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함 특정 종속기업을 보고기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p>②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포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연결재무제표상 인식되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기업의 일부로는 간주되지 않음 관계기업·공동기업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나 기회가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관련 공시가 필요할 수 있음 	<p>① 중요한 정보 공시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 기업은 공시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음 단, 특정 정보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전체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함 <p>② 실무 적용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부적으로 양적 및 질적 중요성을 적용하여 종속회사 선정 방식으로 접근 가능함 정보 단위 기준으로도 검토하여 중요한 정보 누락 여부 확인 필요

Source: 삼정KPMG

(4) 인증 대응 준비: 인증을 고려한 공시 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제 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시행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인증 의무화 이전의 준비 기간 동안 국제인증업무기준 3000(개정)(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Revised), ISAE 3000)에 부합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향후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ISSA 5000)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율 인증 기간부터
향후 인증을 대비한 ISSA
5000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ISSA 5000의 도입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공식적 정보로
강화하는 인증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

지속가능성 공시를 넘어선 '재무적 영향' 공시에 따른 인증 트렌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핵심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적 재무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즉,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무적 언어'로 구조화해 전달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KSSB 공시 체계의 '재무 보고화' 경향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인증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구체적 수치 영향을 산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에서 수행되는 복잡한 회계 추정 검토 및 공시의 적절성 평가 절차와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KSSB 기준에 부합하는 충실한 공시는 단순히 지속가능성 지표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재무제표와의 일관성, 정보 간 정합성,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전용 인증 기준 도입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현재 통용되는 인증 기준인 ISAE 3000(Revised)은 컴플라이언스나 시스템 보안 등 광범위한 비재무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설계된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정보가 지닌 정성적 요소나 복잡한 추정치를 다루는 데에는 절차적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향후 도입되는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대상으로 설계된 전용 인증 기준으로서 인증인의 절차적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ISSA 5000은 인증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통제를 포함한 기업의 내부통제 체제를 이해하고, 정보가 생성되는 정보시스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 또는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최종 결과값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하게 정보의 무결성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적 기반까지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ISSA 5000은 보고기업의 통제 범위 밖에서 생성되는 가치사슬의 정보를 포괄하여 인증 증거의 적절성과 신뢰성 확보를 고려한다. 스코프3와 같이 외부 가치사슬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인이 정보의 원천과 성격 그리고 입수된 제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미래예측정보에 포함된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치와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데이터의 객관적 근거와 잠재적 편향 가능성까지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더 이상 자율적이고 보조적인 정보 영역이 아니라, 재무제표와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식적인 정보로 재정 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화된 인증 환경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재무 보고 프로세스와 데이터 흐름의 통합적 관리

ISSA 5000 하에서 인증은 단순히 최종 공시 산출물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의 원천에서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을 이루는 환경·사회적 지표는 구매, 결제, 자산관리 등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 수준의 데이터 흐름 분석과 통제 취약점 식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내부통제 환경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평가해 온 전문적인 인증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공시정보의 데이터 무결성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감사방법론과의 정합성 및 실무적 위험 관리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인증 증거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 감사와 본질적 구조가 유사하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 및 제2호가 요구하는 재무영향 공시는 재무제표 내 수치와 긴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회계추정 검토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식별에 숙련된 전문성을 활용할 때 자본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신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정 의견'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전반적인 공시 품질을 높이는 실무적 대응 방안이기도 하다.

인증 가능성 기반의 공시 체계 초기 설계

강화되는 인증 환경에서의 성패는 공시 체계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인증 대응성(auditability)을 반영했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은 정보의 발생, 승인, 기록, 처리 전 과정에서 인증 절차 적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정보시스템과 내부통제를 설계해야 하며, 특히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시스템 통제와 증빙 관리 경험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다면, 인증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보완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향후 증빙 부족이나 통제 미비로 인한 인증 실패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결국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환경은 단순한 비재무 정보의 나열을 넘어, 재무제표 수준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재무영향 공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공시 체계 설계 초기부터 인증 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반영해야 하며, 재무보고 시스템과의 통합적 운영을 기반으로 재무·내부통제·지속가능성 조직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공시 데이터의 무결성과 추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만이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강화된 인증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선제적으로 고도화 해야

IV. 나오며: 지속가능성 공시, 이제는 실행체계 구축의 시점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본 보고서는 공시 체계 구축 방향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시 프로세스 설계 측면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주요 특징은 공시기한의 단축, 법정공시로의 전환, 지속가능성 요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정량적 공시의 중요성 강화, 데이터 취합범위 확대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지표 정의, 종속회사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데이터 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 수립, 조직 및 거버넌스 정비,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 고도화 등을 세부 구축 과제로 제안했다.

둘째, 거버넌스 측면이다. 공시 의무화에 대응해 국내외 선도기업이 조직과 운영체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도입 이후 공시 담당 조직은 단순한 정보 취합 기능을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중장기 전략과 공시 데이터 전반에 대한 전사적 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기업이 이를 위한 최적의 조직 설계와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투자자 중심 공시 강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총괄 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변경하거나, 공시 기능을 재무·회계 부서에 배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공시 의무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 전담 인력이 확대되는 추세 역시 관찰되었다.

셋째, 보고기업 및 공시범위 설정 측면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연결실체 기준으로 공시하고,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실제 공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단위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이 공시 체계 구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 측면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을 중심으로, 향후 제3자 인증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가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을 설명하였다. 특히 강화되는 인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작성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재무제표 수준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자원과 요구된다. 투자자 관점의 정보공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서를 포함해 그동안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정보 관련 부서가 다수인 만큼, 부서별 공시데이터 작성 프로세스를 개별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점은 공시 체계 구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본사 중심의 기존 공시 관행으로 인해 자회사 내 지속가능성 공시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현실 역시 공시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시, 공시정보의 특성, 공시 의무화가 공시 담당 조직에 요구하는 역할,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에 요구되는 신뢰수준 강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지속가능성 공시정보 체계
구축의 실효성 제고 위해,
재무 부서를 포함한 전사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단계적이고
우선순위 중심 접근 필요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가지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대응조직, 예를 들어 태스크포스(TF)에 재무 전문가를 참여시켜 재무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권역 또는 국가 단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공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지분구조가 복잡한 기업 집단은 주요 계열사부터 공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후, 이를 하위 계열사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적용시점과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이제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조직과 운영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전략을 보다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Business Contacts

ESG 비즈니스그룹

ESG 정보공시/인증 자문

황재남 부대표
jaenamhwang@kr.kpmg.com

손민 상무
minson@kr.kpmg.com

한대근 상무
dhan2@kr.kpmg.com

권희준 상무
heejoonkwon@kr.kpmg.com

ESG 전략 자문

이동석 부대표
dongseoklee@kr.kpmg.com

문상원 상무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kyungsoopark@kr.kpmg.com

허인재 상무
ihur@kr.kpmg.com

ESG 리스크 자문

정우철 전무
woochuljung@kr.kpmg.com

여준형 전무
junhyungyeo@kr.kpmg.com

ESG IT 자문

이승근 상무
seungkeunlee@kr.kpmg.com

Authors

삼성KPMG ESG 비즈니스그룹

손민 상무
minson@kr.kpmg.com

김영곤 이사
ykim144@kr.kpmg.com

권민정 이사
minjeongkwon@kr.kpmg.com

권현정 이사
hkwon10@kr.kpmg.com

홍관선 이사
kwansunhong@kr.kpmg.com

home.kpmg/kr



본 보고서는 삼성KPMG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